

속 기록

- 회 의 명 : 제29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3. 26(금) 14:20~18:37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2021년 3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 후 5개월 만에 대면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회의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본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제한된 공간에서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지침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1개의 의결안건과 6개의 보고안건 그리고 3개의 논의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시던 전효관 전 사무처장이 이직해 가심에 따라서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이 사무처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운영규정 제4조 5항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에 따라 선임 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는 성원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전차(前次) 회의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3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7차 전체회의에서는 6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4건은 원안의결이 되었고 2건은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전차(前次) 회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혹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모 추진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안건은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 별도 공모 추진 계획(안)입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올해 공연예술부에서 2016년도 이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그다음에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대한 사업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끌어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의결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참고자료 1쪽을 보시면 공연예술제(축제포함) 사업에 대한 경과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공연예술제와 2020년도에 지역으로 이관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에 대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정체성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간에 지원액 규모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형태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쪽의 사업별 연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고에서 문예기금으로 38억 정도가 이관되면서 당시에는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 민간단체 및 장르별 협회 사업들 27건 정도가 지정사업 형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는 이 사업들을 문예기금에서 하면서 일반공모제와 지정공모제로 이원화시켜서 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정공모제 사업으로는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한국창작음악제 등 9개 사업에 38억 정도 규모의 사업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쪽 진행이 되다가 2015년에 다시 국고 관광기금으로 사업들이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지정공모 사업형태와 일반공모제 등 2가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쪽 진행되어 오다가 지역대표공연예술제가 2020년도에 균특법에 의해서 지역으로 완전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닌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와 같이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기재부에서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완전히 공모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공모제 전환을 통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예를 들어 국제성 사업 같은 것들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해외에서 예술가들을 초청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대표공연예술제도 문체부와 예술위를 계속해서 오가는 평풍을 치는 방식으로 기금들이 변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문제점과 시사점이 도출되었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공연예술의 사업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예술위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업목적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표성 그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우수공연의 창작·발표에 대한 기회, 국민향유에 적합한 대상사업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원규모의 기준조차도 부재해 있던 상황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20년도 기준으로 다건 지원에 따른 대표성을 상실한 소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평균 지원액이 행사 1건당 연극의 경우 1억 5,000만 원 정도고요. 무용이 1억 500만 원, 음악이 1억 4,500만 원, 전통예술 4,2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65건 정도가 선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상당한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상위 사업으로 약 3억

6,0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9개 사업을 제외한 평균 지원신청 대비 결정금액들은 각 사업별로 2019년 기준으로 약 4,400만 원, 2020년도 기준 5,300만 원 정도의 소액지원 형태로 해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모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연예술제 중에서 병역특례와 관련된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국제무용콩쿠르', '신진무용예술가육성프로젝트' 등 2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는 모습에도 봉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대표공연예술제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정부부처 국고보조금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국고보조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0개 사업정도가 대한민국의 공연예술제와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오가면서, 그러니까 한해는 대한민국의 공연예술제에서 지원을 받고 다음해에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서 받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공모제 전환에 따른 연례적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의 특성상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연례적 지원사업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연극제 등 사업이 있는데요. 매년 티켓 수입이라든가 참여할 때 발생하는 수입 같은 것인데요. 이런 수입에 대한 지출하고 이 수입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이런 내용들은 결국 특정 예술단체들이 수입에 대한 부분을 착복할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의무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보조사업비 일부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 폐지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자기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사업별 유형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대한민국연극제나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 법정기관이 되겠죠.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보조 받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이 수익금을 당해연도 사업을 개최했던 각 지부에 전액 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부담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은 선정단체현황이나 사업별 내용 등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기반으로 해서 2021년도 공연예술제 별도 공모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의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기반 구축과 국민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공연예술제 사업목적(대표성) 달성을 위한 장르대표공연예술제와 우수공연예술제로 지원 유형을 이원화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장르대표공연예술제로 3년간 연속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 202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속발굴을 통한 민간단체의 공연예술제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20년도에는 4개 단체가 선정되어 '22년도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공연예술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러니까 지원규모를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이번 사업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년간 지원, 그러니까 3년 확대에 따른 예산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준으로 지원신청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장르대표공연예술제와 우수공연예술제의 평가체계를 이원화 하자고 해서 저희가 올해 확보하고 있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등을 고도화 시켜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조항이나 다양한 자문 등을 받았는데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도 지역대표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것은 법조항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 법을 어기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따라서 사업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의 추진방침입니다. 지원대상 및 사업으로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를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문화예술단체가 되겠고요.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예술 기반의 다원예술로 기초공연예술기반의 복합장르 공연예술제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이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예술위 내의 지원사업들을 기재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고할 때도 이 내용을 보완해서 국고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해서 공고할 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제외 대상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공모사업들과 거의 유사한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선정된 지역대표공연예술제는 지원불가로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공연예술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고요. 지원규모는 5,000만 원 이상 10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 주셔야 할 사업들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약 9억 5,000만 원, 연극제 같은 경우에도 6억 이상 7억인데요. 다중지원 총량제한에 걸리는 규모를 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다중지원 총량제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원유형 및 세부내용에는 올해 개선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도 1월부터 수행되는 공연예술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모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후 모두 지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진 공연예술제로 되어 있고 우수공연예술제는 3년 이상의 연속 개최된 공연예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장르대표의 경우 3억 이상 10억 미만, 우수공연예술제는 5,000만 원 이상 4억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에는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에는 해당 공연예술제의 10년간 실적자료와 3년에 따른 비전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지원신청서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입니다. 올해 총 전체사업의 규모는 61억 5,900만 원인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2020년도에 장르대표로 선정되어 올해 4개 단체에 대해 전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할 규모가 약 15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예산은 45억 9,400만 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장르대표공연예술제에 대한 평가가 4개 단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만한 사업이 수행될 수가 없었기에 평가위원들이 전체 사업들을 모두 'pass'를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공모 추진 일정(안)은 오늘 의결이 된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공고가 나가고 4월 1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지원심의를 하고 결과발표를 한 이후에 지원금 교부도 5월 중에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일반적인 사안들이라서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향후 일정을 담았는데요. 사실 올해도 시기가 많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모를 진행하는데요.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대표공연예술제가 지역으로 이양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진행하지 않고 기획사업화 한다거나 지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사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대한민국대표공연예술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느 기준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현장과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전번호 제 866호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 별도 공모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연예술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셨다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없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부장님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다원예술이 복원되니까 다른 사업들에도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벌써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사실 8쪽의 첫 번째 박스에 모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원예술부문을 지원하는 내역을 세어보면 내역 사업으로는 12개입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다원예술지원이 빠져있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이 빠져있고요. 기금은 아니지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문화다양성 속에 다원예술이 포괄되어 있다고 하면, 물론 문화다양성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원예술과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포괄된다고 하고 그것을 포함하면 12개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다원예술을 순수한 장르개념 말고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알고'라는 것 보다는 나중에 포괄적으로 같은 사업일 경우에 이쪽에 신청을 하라는 의미로 나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창작지원과 향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다양성 사업은 사실 국고사업이고 저희가 설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향유 사업이기 때문에 창작지원 쪽으로 다원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저희가 마련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원예술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폐지가 됐다가 복원이 되는 것인데 자꾸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직원 분들도 ‘신규’라고 하지 마시고 ‘복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을 드리자면, 6년 동안 공백 기간에 대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현장에서 다원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입장에서 다원예술의 진정한 복원은 예전에 있는 그 모습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6년 동안 공백동안 지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을 법한 상황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대리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복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재공모 할 때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 : 저는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공모로 나오고 장르대표공연예술제라는 게 작년부터 이원화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된 취지나 발생한 이후의 효과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장르대표공연예술제는 3년간 지원사업 방식으로 예술위원회가 장기적 지원 관점 안에서 사업들을 개편하고 있는 하나의 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레축제 같은 경우 해외에서 섭외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당해연도 사업 예산이 결정됐을 경우 전년도에는 초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서 보면 미리 사업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가 있고 향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수공연예술제 지원을 통해서 투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공연예술제는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예술제가 계속해서 개발되어져야 하고 진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술제가 진입할 수 있는 문호를 일정정도 열어놓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의 대표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조금 개편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연례적으로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마냥 딜레이는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가고요. 지원이 결정되고 나면 개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르나 우수 등을 중장기적으로 3년으로 생

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외에서 공연을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3년 뒤에는 장소도 있어야 하고 재원의 안정성도 있어야 불러올 수가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에요. 당해연도에 해서 당해연도에 결정한다는 부분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의 차별성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역대표 등은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받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의 예산이나 중앙의 기금으로, 문화예술기금으로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지원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고민을 해서는 안 되고 시·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업입니다. 국회 지정사업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달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평가를 엄밀히 하고 이것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것입니다. 4년간이든 3년간이든 지원을 한 다음에 10~20%를 쳐내면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열어놓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먼저 상대평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하나의 창작 작품을 만들 때도 1억인데 어떤 경우는 3,0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6,000만 원으로 규모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 규모도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으로 가고 전반적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7개 시도하고 파이를 키우면서 위원회가 끌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임 이종국 부장이 해 왔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그냥 계획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추가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61억이라고 하지만 장르대표를 빼면 46억이고 2020년도에는 76억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모부분은 굉장히 축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개 대표 장르를 선정하셨는데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발레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용이나 페스티벌은 전부 다 국적이 한국분들이..... 정체성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연주자들이 대부분, 오케스트라는 외부에서 많이 오고 굉장히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로 알고요. 외부에서도 연주자들이 오시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갑자기 연주자들이 바뀌어서 한국 사람으로 대체가 되고요. 또 손가락을 다쳐서 취소가 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정체성 문제는..... 저도 통영 국제음악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장르와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금 현재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2019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지침에 보면, 개최횟수가 총 7회를 초과한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요구 시 그간의 성과, 계속지원의 필요성, 지원종료계획 그다음에 자부담 확대 계획 등

을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수입에 대한 증대 방안을 통해서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기획재정부는 저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가 밝지는 않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켜야 하는 사업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기재부의 예산 심사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들이 이런 원칙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지원심의 기준과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축제로 명명되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공연제이기 때문에 공공의 재원도 들어가서 공공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심의기준 같은 것을 보면 ‘사업수행역량’ 이런 심의기준이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축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공연제라는 공공성 차원을 생각해 보더라도 행사들을 향유하는 분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심의나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체계 안에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가체계도 마찬가지로요. 행사를 기획할 때 대관을 하는 장소들이 역사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큰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악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권적으로도 보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대체가 된 경우가 있고요. 축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평가지표, 심의지표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 평가의 내용들을 보면 중복해서 언급이 되는 게 코로나19를 대비한 대응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내실 때 코로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단계별로 기획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하고 코로나가 없다는 전제에서 계획서를 내셨던 건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2020년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계획들이 없이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저희가 누락시켰는데요. 사실은 포괄적인 역할 안에서 지원심의기준 안에 사회적 역할에 20점 정도의 배점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대비계획 등은 전체 계획안에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면 예산도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서 계획서를 내라고 요구를 하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그 정도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는데요. 사실 단체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상황은 코로나19가 사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형태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장애인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로 잘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현장에 하라고 말기는 형태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예술위에서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기 진행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말씀해주신 기관명을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국장애인문화?

이진희 위원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등이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반영되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 : 심의방법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심의방법에서 서류심사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서류심사 전에 공유 및 토론을 병행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안별로 틀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심사에서 일괄적으로 서류심사 전에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금 지원심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예술위가 공통적으로 취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대상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서류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심의위원들은 15인 이내로 저희가 구성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 심사 때는 다 모인 후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종열 위원 : 서류심사를 통해서만 1차 심사를 거르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기초적인 역량을 파악 한다기보다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면으로만 파악할 때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그분들의 동영상이라든지 하다못해 링크에 서류로 걸어주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법으로 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혹시 인터뷰 심사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정종열 위원 : 인터뷰까지는 아니고요. 서류심사에 자료를 아예 제출하도록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서류심사에 통과한 사람들이 자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 그때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유은선 위원 : 다른 지원보다 금액도 크고 3년간 지원이 되다보니까 장르별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내역을 보내주셨는데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받는 팀만 받는구나.”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류로 걸러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로 4월에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때도 인터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량을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예술위 안에서는 총량 법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서울문화재단 내역을 통합해서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하시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저희 입장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모든 2021년도 사업들은 법적으로 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통해서 선정된 모든 지원결과들을 받아서 심사를 할 때 데이터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같은 경우 공모가 되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게도 저희가 선정한 결과와 국가보조금법에 따라서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은선 위원 : 서울문화재단은 발표를 했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발표를 했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면 이 단체들에 한해서는 지원불가를 명시하게 되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서울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축제지원사업이 있고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법적으로 중복지원을 못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서울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행사성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요. 서울문화재단이 직접하고 있는 축제문화지원사업이 있고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행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축제지원사업은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 때.

유은선 위원 : 사업은 같은 것일 확률이 있거든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동일사업으로요?

유은선 위원 : 예.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동일사업으로는 예술위 내부에서는 지원불가합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역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그 부분은 아마 심의 때 걸려질 것입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보조금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지역대표공연예술제는 보조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문화재단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지역에서 매칭 하는 것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리스트를 올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중복을 한다거나 안 한다는 것. 혹은 금액을 얼마로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중복부 분이나 금액이 적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은선 위원 :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29일에 공고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공고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은선 위원 : 앞으로 같은 사업이면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대표공연예술제는 신청제외대상 사업 이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축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신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유은선 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같으면 결국 한 사업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받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500만 원과 3,500만 원을 받으면 7,000만 원이 되는 것인데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만약 그쪽에서 지원신청을 했을 때 예산 들의 배정이 달랐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남요원 감사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부담해 왔던 지역대표축제도 저희가 지원을 그동안 해줬죠. 그런데 그 지역대표축제가 보조금법상 2020년도에 지역으로 모두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 지역대표축제가 있고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다양한 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보조금법상

서울시 지역대표축제는 우리가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화 되어 있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원축제 중에서 우리 예술위에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시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와 동시에 매칭으로 들어와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그리고 저희가 별첨 자료로 나눠드린 자료 15쪽을 보시면 각 사업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규모를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15쪽의 2020년도 사업을 보시면 ‘신진무용예술가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으로 5,000만 원 받으면 지방비로 3,5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지방비라든가 다양한 기금지원 조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을 막아버리면 사업을 민간단체가 운영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지원규모를 예술위원회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부분을 올해 하반기에 공청회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면 만약 나중에 양쪽에서 했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들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넣으면 어떨까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 업을 할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백 위원 : 공연예술지원사업에서 평가항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전 심의에 있어서 이의 신청절차 등은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요. 진행된 이후의 사후평가가 사업내용 자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술의 장르 중에 문학 등은 1인 창작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다중이 참여해서 하는 공연 예술의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이라든가 성적 불평등이나 성폭력 등의 내용이 평가 속에 점검되고 있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전년도 사업평가에 제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2월 8일에 부임을 하면서 전년도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했거든요. 어쨌든 장르대표로 선정되는 평가지표 체계를 올해 개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불공정 관행이라든가 장애인접근성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실 공연행사지원사업의 의미가 예술가에게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관점 안에서 역할들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평가지표들을 반드시 올해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대체적으로 ○작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발생 이후에 우리가 조치를 하고 부담이 커지는데요. 앞으로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의 한계가 있고 장치에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하고 정산 정도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

성원들 사이의 위계라든가 차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은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중간 중간이나 사후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평가항목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13쪽의 향후 일정을 보시면 하단의 박스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사업목적의 투명성, 사회적 역할 등을 같이 교육하고 안내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넣고요.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도 지표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시경 본부장님과 홍승욱 부장님께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와 관련해서 사업의 불안정성 그리고 그동안 이행과정에서 사업의 변경절차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적정 규모의 상향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홍승욱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재부에서는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산의 ‘목’은 대한민국공연예술제라는 하나의 ‘목’이죠. 그리고 그 ‘목’에 의해서 지탱하는 ‘항’으로 나오면 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재부나 예산당국이 볼 때는 아마 ‘목’만 볼 것입니다. “대한민국대표공연예술제에 연간 이런 정도의 예산이 간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 규모가 가면 다른 행사성 성격의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과연 충분하게 자립성을 갖고..... 그러니까 예산당국이 보는 것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었을 때 자립성과 독립성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공청회도 하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현장의 의견도 듣고 문체부나 기재부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반드시 가져가야 될 주안점 중에 하나가, 기재부가 편성하고 있는 일몰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행사일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일몰제도에서 특히 국제행사 일몰 제도를 7회. 그래서 현재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게 비엔날레가 된서리를 맞고 있고 부산영화제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7년 이상 지속해왔던 행사들이 경쟁력을 못 가졌을 때는 점차 축소해서 가는 게 재정당국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행사냐? 우리는 창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동시에 이 축제행사를 통해서 국민들 다수의 향유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변별성을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행사성으로 규정되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국제행사와 비교를 해도 이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엔날레나 여러 가지 국제행사와 비교해서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다양성 등을 조금 더 섬세하게 구조화 시켜서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식과는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은선 위원 : 저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작년에 심사를 할 때도 전통예술 같은 경우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정된 팀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일몰제 얘기가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 팀들만 줄 것이냐?” 전통예술 같은 경우 경

쟁력이 강한 팀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들이 계속해서 받는 것이고 이 팀들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발전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몰제를 이번에 넣을 수 있으면 5년이든 7년이든..... 만약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이라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한다거나 일몰제로 한다는 것을 넣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고필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문화관광축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문화관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서 행안부에서 해 보려고 해도 이미 밀고 나간 것들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반대로 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협회 차원이라든지 단체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축소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또 우리 안에서 버릴 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공청회라든지 공연예술제 비교를 통해서 이것들이 국민들의 문화력을 신장시키는데 있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과 창작자들에게 어떤 힘을 부여하고 있는가?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도 있어요. 주최 측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방금 유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라든지 방안들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방이양 이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방위적 지적에 대해서 종합을 해 보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고필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라고 하는 것이 제작년 기준으로 35개입니다. 7,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까지 나눠 차등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예비주자로 들어가려고 온 지역의 관광축제들이 1년 내내 기획서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브랜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예산의 크기 등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제도가 못 받쳐 줄 뿐이죠. 1996년에 출발한 문화관광축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의견을 모두 담은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최우수'면 명예제도로 졸업을 하기도 하고 자생력을 확보해서 가기도 하면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수익구조를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술축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대표공연예술제까지 포함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혁신적 준비 없이 사업의 큰 부분의 지방이양을 막지 못한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표공연예술제사업의 새로운 설계나 세팅을 위한 정책소위의 대응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전고필 위원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롤모델이 없지도 않고요. 우량한 문화관광축제의 운영사례 등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예술축제와는 차별이 있겠지만 브랜드도 저희가 졌으면 좋겠고요. 예술위원회가 브랜드 가치를 줘서 예술축제들을 부양하는 방식들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 중장기적 대응 없이는 이 사업 역시 감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재부 논리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올바른 대응이 아닌 듯 싶어서요. 적

어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은 올해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사업의 개선을 목표로 두고 일정정도 우리 소위에서 반응해서 개선안을 함께 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은선 위원 :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심사하면 이것 같이 심의위원들이 이 구동성으로 일몰제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의견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되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금 일몰제 이야기는.

유은선 위원 : 아니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심의 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부서장은 간사역할을 하면서 참여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유은선 위원 : 그런데 알고 있으면 그 중에서 개선할 부분을 추려서 정리를..... 왜냐하면 이것은 맞물려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보면서 가장 정확하게 문제점을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안건에서 보면 그런 건..... 저는 사실 위원회를 1년이 채 안 되게 했지만 그런 심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게 연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종관 위원장 : 일단 정책 소위가 이 문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유은선 위원 : 정책소위 이전에 예술위원회 내에서 지원제도와 관련된 시스템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책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원재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사업혁신 TF가 해산된 건가요?

유은선 위원 : 마무리가 됐죠.

이원재 위원 : 제가 의견을 드리면, 이것은 의견입니다. 저도 이 주제를 정책소위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요. 위원장님의 취지가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회의를 해 보니까 현장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된 위원과 상의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별로 올라온 다음에 개별 코멘트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위원회 회의가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코멘트 내용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이렇게 논의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시간을 쓰다가 뒤로 가면 토론을 못해요.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혁신TF가 해산이 됐으면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해서.....그리고 사무처도 일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토론 등이 필요한 내용들은 위원들이 토론을 하고 기본적인 코멘트는 그렇게 처리가 되면

논의가 효율적이고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사무처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전체회의 때 조금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남요원 감사 : 이원재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방금 보고서 안에 보면 쪽 이 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했고요. 그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경과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4가지 압축적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재구조화 하는데 충분한 현장의 의견과 관계되는 문체부와 숙의하고 내년도 사업진행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TF가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세스까지 위원님들께 모두 보고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결과, 또 우리 해당부서의 본부장 이하 부장님이 계시니까 의견들을 정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은선 위원 : 정리가 되어서 평가로 올라온 것은 저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몰제는.

남요원 감사 : 제가 말씀드렸던 일몰제는 기재부가 갖고 있는 일몰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혼선되면 오히려, 기재부가 모든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지침으로 있으니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 공청회도 갖고 현장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이 사업을 설계하실 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경쟁력이라든지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가지고 있는 수월성 등을 잘 설계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 위원님이 심의과정에서 “우리도 일몰제를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 혼선이 될 것 같아요.

유은선 위원 : 아니요.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졸업’이라는 용어들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심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할 때 거기에 오는 심의위원들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확인을 할게요. 지금 있는 대로 제도개선(안)에 관해서 본부 차원 혹은 담당부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만 일단 확인을 해 볼게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향후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모절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보고를 4월에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겠어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5월이 되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5월에 1차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이후에 계획들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개선(안)을 보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도록 논의수순을 잡고요.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고필 위원 : 이 안은 같이 보면서 개선안이나 앞으로의 방향 등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전고필 위원님이 문화관광축제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지역 축제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쪽의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경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경주 위원 : 사업혁신TF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원래는 사업혁신 TF를 만들 때의 계획은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짜기 전에 분야별 위원들 간 소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었고요. 마침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셨으니깐 한번 정도 그런 기회를 부장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박종관 위원장 : 간담회 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부탁드립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 당시 사업혁신 TF에서 이종국 부장님과 했던 게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진행은 되었는데 소통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소통이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4월 간담회 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통로를 열겠습니다.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 별도 공모 추진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으시면 5월 달까지 사업개선에 관련된 개선(안)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10분 정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은 6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직무대행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예, 미래사업부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과 기획조정부의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진행상황 보고 등 총 6건의 보고사항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민영 미래사업부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기획조정부장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2개의 사업과 관련된 보고가 있고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먼저 온라인 예술활동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엄민영 미래사업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오늘 보고를 드리는 사업은 작년 추경사업으로 진행했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 일반회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예술활동의 일상화를 대비하는 목적이었고요. 작년에 긴급하게 추진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예술계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작품을 발표하고 예술가와 향유자의 직접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대상은 예술가와 예술가가 포함된 외부 스타트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포함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공모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단위로 예술인들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총괄을 담당했고요. 17개 광역문화재단이 직접 공고는 담당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은 148억 9,000만 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49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온라인예술 창작활성화 지원이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사업이 콘텐츠 지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창작기획 및 저작권 교육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온라인 통합 누리집 구축과 운영, 성과확산, 조사연구, 사업홍보 등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은 17개 시도광역재단과 예술위원회 직접 기획사업을 포함해서 24억 5,000만 원이 기반조성에 사용되었고요. 올해는 8억 8,000만 원 정도가 기반조성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3~4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추진은 8개월 진행되어 올해 3월에 완료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 예술위원회가 문체부에 신규사업을 제안하였고 예산심의가 6월에 끝나서 7월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7월 29일 교부가 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사업추진 경과에는 이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예술가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실 재단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이 편성되기 직전까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광역재단이 공모사업 추진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고요. 현재 결과보고를 받고 사업을 완료하고 있으며 이번 주 화요일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신설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했으나 평균 경쟁력 4.2 : 1로 공모 선정이 완료되었고요. 현재 2,000여 개가 넘는 콘텐츠가 제작 완료되어 저희 통합 누리집에 게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컨설팅·네트워크 같은 경우 추진되기 전에 선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일정이 아니라서 콘텐츠 제작과 병행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러한 장소 대관부터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이드북 1종과 교육영상 3종이 제작되었고요. 그리고 신청자를 받아서 비대면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이외에 플랫폼의 목적 자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콘텐츠를 저희가 모아서 확산을 위한 기본적인 용도로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조사연구, 홍보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주까지 문체부에 사업에 대한 정산과 결과보고를 앞두고 있고요. 2021년 사업공모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번의 '21년 주요 변경·개선 내용은 작년의 경우 17개 시도 광역재단이 공모를 담당하셨는데 올해는 예술위원회 직접 추진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관리나 내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사업이 주가 되지만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작을 위한 교육과 저작권에 대한 컨설팅을 올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유형은 작년에 저희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17개 광역재단에 제시를 하였는데요. 그 유형은 '관객개발형', '창작활동형', '플랫폼기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보였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콘텐츠를 제작하는 형과 플랫폼형으로 나뉘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도 참여예술인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형 플랫폼에 더하여 현재 저희가 보유한 콘텐츠를 확산할 수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예술적 수월성보다는 실험성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지원방향성 역시 기술의 변화 그리고 온라인 환경, 새로운 예술, 실험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술가의 도전과 실험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오프라인 현장 무대를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독특한 그리고 특화된 창작방법과 발표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규모로 기재부 지침이 평균 1인당 500만 원 기준으로 900명이 대상이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지원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현재 2025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예산액은 올해 49.3억에서 '25년 99.8억까지 확대·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임1에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던 17개 시도 광역재단의 사업비 배정액과 선정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업비 배정액의 기준은 3가지 요소를 감안하였습니다.

각 해당 지자체 별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에 대한 증명과 인구 10만명 당 예술활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를 역산으로 선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 광역재단이 모두 수용해서 해당하는 금액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붙임2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창작물 사례인데요. 여기에는 14편을 실었습니다. 이 14편은 주목할 만한 온라인 예술콘텐츠로 선정된 작품들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창작방식을 실험한 콘텐츠를 제작했거나 기존의 예술창작과 다른 분야에 대한 부분을 결합해서 실험한 내용 등이 눈에 띄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장미’ 같은 경우에는 대구 쪽의 작품이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대구와 독일에 있는 예술가들이 비대면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서 창작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조율해서 작품을 완성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주목할 작품으로 ‘극단 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 4인으로 구성된 연극단체인데 배리어프리화 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작품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자막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고민과 장애인 예술인들의 향유를 위한 부분들을 잘 표현하신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전고필 위원 : 고생을 하셨는데요. 전체 채널 자체가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과의 호환성 등 그것을 통해서 큰 플랫폼에서 같이 홍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비용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끼리 노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염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저희가 고민한 부분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모요강 중에 플랫폼 사업의 유형 중 서비스 기획형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서비스 기획형은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대국민 예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유형을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술 콘텐츠 형태는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 게임 형태로 다양한데 그런 형태를 통합 누리집에 모아놓고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나니까 일부 민간 플랫폼에서 오히려 저희 콘텐츠를 활용하고 싶다는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의외였지만 아프리카TV 같은 곳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CGV 같은 경우도 이런 영상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협업하고 싶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유형의 예술 확산을 위한 스타트업 쪽에서 저희 콘텐츠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누리집 오픈이 올해 3월에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런 효과라든지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기재부나 국회에서도 콘텐츠 유통 확산에 대해서 요구하셔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은 많지만 지금은 확정된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정책연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박경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경주 위원 : 예, CGV 등에서 연락이 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작품들은 공공시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유통은 안 되고 저작권료도 받을 수 없는 등 어려움이 많아서 현장에서 대안영상을 하거나 아트필름 계열이나 실험적인 영상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공시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온라인의 공공시장을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작가들에게 저작권료는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요. 저희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나갔으니까 차기 연도나 차차기 연도에 콘텐츠를 가지고 작가들이 저작권료를 받고 관객들이 자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료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예술인들이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예술위원회는 교육이나 홍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플랫폼에서 활용되었을 때 저작권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가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기반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동영상 형태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에 대한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아직은 많지가 않아서 전반적인 온라인 예술의 형태에 따른 확산 전략을 찾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리고 외부 기관들과의 협업이나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추가로 제안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저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대안이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에도 이런 영상 작업을 하거나 미디어 기반의 작가들은 자기 저작권료나 저작사용료 등으로 연결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차피 올해도 온라인 사업을 굉장히 큰 예산으로 하는데 예산에 연구사업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같이 연구가 되고 연결이 돼서 그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민영 미래사업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과공유대회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17개 시도 광역 전체가 참여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례로 이야기 할 만한 사업이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국비로 성과가 났으니까 예술정책관이 참석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예산 심의가 열리는 바람에 예술정책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는데요. 성과를 낸 분들과 담당사무관과 제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대로 사업을 개선해야 할 지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 과정에서 수상을 한 예술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구술 사업으로 머물러서 무슨 예술이 되냐?”, “이건 얼마든지 성과도 낼 수가 있고 얼마든지 가치도 창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미래자원도 될 수 있고 미래예술 표현 방식도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범위를 빨리 넘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단적인 것이지만 얼마나 현상이 무섭게 변하는지, 또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인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 사업도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잘 갈무리하고 사업을 잘 이어가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의견을 다 주시지 못 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포장하겠습니다.

이외에 잘 아시는 것처럼 3월 10일이었죠? 저희 장관과 워크숍 이후로 문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문체부가 추경 1,884억으로 인력사업을 전개하고 이 중에서 공연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336억짜리 기존 공연예술인력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예술관련 인력지원의 예산을 새롭게 확보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예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안을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으로부터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진행상황입니다. 지금 긴급사업 관련해서 총 4건의 사업들을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재부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업은 민간공연장 활성화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대관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바로 전달될 수가 있고 공연예술분야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문예기금 사업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도 10억을 증액해서 긴급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올해도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아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 역시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장관님과의 워크숍이 종료된 후,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문학 분야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기재부에 전달을 했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연분야에서 나왔던 객석, 공공예산을 활용해 객석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과와 같이 사업 규모 등을 협의하면서 193억까지 사업규모를 가늠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뒤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시면 민간공연장 활성화지원은 당초 25억에서 50억을 증액해서 75억이고요.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은 당초 10억에서 10억이 증액된 20억입니다. 그다음에 문학창작육성 관련해서 2가지 사업꼭지를 전달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코로나19를 예술가들이 기록하는 콘텐츠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학작가 뿐만 아니라 타 예술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사업의 개방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사업계획도 다시 수정을 해서 기재부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이 통과되고 오늘 위원회 회의가 시작될 때 기재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반영된 것은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50억만 기재부에서 수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단년도 예산 협의 때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재난지원금에 편성되었던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336억으로 3,500명 규모인데요. 그 사업은 일반회계 수탁사업으로 저희가 수탁을 하게 되고 4차 재난지원금에 있는 버팀목자금지원 부분이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과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유란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못 들어가면 다음 추경에서 다시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제가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객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문화예술과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다른 지원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그때 우리 현장에서는 객석지원 방식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을 제안해서 주말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문학 분야 등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객석지원 사업 자체는 직접적인 피해보존의 성격이라서 버팀목지원과 같은 유형의 사업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문학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기재부도 실무 차원에서는 문학뿐만 아니라 타 장르까지 포함해서 논리를 보완해 보자고 해서 어제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담당사무관이 전화를 해서 “문학 쪽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많이 거쳤는데 지금 현재 버팀목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 이번에는 반영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다음 기금운용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일정을 갖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예진흥기금 변경과 관련해서는 즉시 진행 상황들을 위원님들과 공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기금운용계획의 주체입니다. 지금 기금운용 변경의 의결 주체이기도 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마땅히 아셔야 해서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체부나 예술위가 모두, 특히 장관님과의 대화에서 힘이 쏠리면서 최대한 대응을 했는데 1차적으로 예산 장벽에 막힌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회계가 닫힐 것으로 예측할 수는 없고요.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당장 다음 달에 시작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 접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연도 중에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고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학 분야와 연극 분야를 이번에 제안했지만 안 된 부분의 경우 내년에도 유효한 사업이니까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더 적극적으로 논리를 보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시백 위원 :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안 된 것이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협의에서는 최종적으로 문학 분야는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작년에 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몇 억이었죠?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464억 원입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전체 기금변경 규모는 465억 규모고요. 적립금 감액규모가 424억 정도가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단년도가 424억이었고 전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465억 규모였죠. 올해 코로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것은 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고필 위원 : 지역의 공연예술 현장에 가니까 공연장특성화 사업을 올해는 문화재단으로 내려 보낸다고 하던데요.

박종관 위원장 : 일단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다음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산 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문체부를 포함해서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변경에는 손에 쥘 것이 없다는 말씀을 어렵게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새롭게 되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논의 이후에 전고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연장 관련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불러서 저희들이 내려갔고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에 이르기까지 지방으로 이양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고 저희들이 방어를 했습니다. 문체부의 공연전통예술과의 운태육 과장과 제가 일단 들어갔고요. 손미숙 사무관과 이민하 차장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도 있었고 기재부도 있었고 국무조정실도 있었는데 이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운 과장이나 저의 실책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부처의 사업들이 많이 내려가는데 첫째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내려가면 발전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결정이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불렀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필을 했던 것은 몇 가지입니다. 일단 지역대표공연예술제를 내려 보냈더니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정도만 실제로 공모를 하고 있고 25%정도가 예산도 깎였고요. 사업도 16%내지는 17% 정도가 가질수도 깎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내려 보내면 “이 부분은 많이 소멸될 것이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성숙된 다음에 지역에서 받을 정도가 됐을 때 해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무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정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꼬리표를 달아 달라.” 지역으로 보낼 때 예를 들면 3개년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를 하겠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 :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반복되었던 구조적인 것이고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데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안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일정 정도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가 아니라도 그것이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연초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 몇 분의 반대로 그것은 진행이 안 되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아닌 현장 예술인처럼 분노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희도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위원회인데요. 이 사안을 관철시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간단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히 사안이기도 해서 사무처와..... 아주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훨씬 사무처가 오랫동안 기재부나 문체부와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점검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같이 해서 정책소위에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위원들과 사무처와 협의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결과물이 있잖아요. 오히려 전문기관인 예술위라든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기재부나 부처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 진급지원 사업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1,000억씩 실패해서 언론에도 나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 위원장님도 괜찮으시고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면 실무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상의 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1기 위원회 평가를 마치면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권리 자체가 방임되어서 모든 책임을 민간위원들이 져야 하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위원회를 하면서 재미가 있으려면 민간위원들이 어렵게 한 결정에 대해서 기재부가 존중해 주는 전례나 터전이 없이 그냥 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1기 위원회 평가를 마치면서 던졌는데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원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여전히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문제로 남게 되고요. 저도 어제 저녁까지 보고를 받은 것과 오늘 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많이 다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순을 잡고 어떻게든지 지금 이야기 한 대로 확인하고 진행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시죠.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큰 틀은 다 이해를 했고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이 사업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것 같다고 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연예술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에 상주하면서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역대표공연예술제처럼 내년도에는 상주단체가 들어가면서 “중앙에서 지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이것도 이를 떼면 지역이 지역만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원칙 속에 집어넣는 것인데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례에서 보듯이 상주

단체육성의 경우에도 지방으로 이양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온전히 살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국비를 주는 무게가 있고 국비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중요도에 방점을 찍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손발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때도 100억 정도가 날아갈 때 손발이 부서진다는 느낌이었고요. 지금도 상주단체 같은 경우 지방으로 이양되면 “온전히 살아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틀의 명분, 지역이 지역만을 위한 예산을 쓸 경우에 지방비를 이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그것을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술의 관광자원화라는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한옥을 이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도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처럼 “이양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 기재부가 지역과 관련되어 있으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개의 계정이 있지만 어쨌든 통 털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시도로 보내려는 것이고요. 아까 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고려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그 과정 속에 예술의 관광자원화뿐만 아니라 상주단체육성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저희로서는 방어를 해야 할 의제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본부장급 실무자를 직접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결과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유은선 위원 : 향후 상주단체 관련해서는 어떻게 일정이 되어 있나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못을 박아서 알려준 것입니다..

유은선 위원 : 그게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온 것인가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국무조정실입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우리는 공연장상주단체 사업이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과 같이 지방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연예술상주단체 사업이 지역에서 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60억 정도 되는 규모가 지자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이 예산을 상주단체 사업을 하든 다른 체육 사업을 하든 자체 편성권을 갖는 것입니다.

유은선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요. 작년에 상주단체 평가를 제가 해서 지역을 다녀보니까 지역문화재단도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유은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무처에서 정준호 교수님까지 문체부에 모시고 가서 우려사항, 지역으로 매칭이 안 되면 사이즈도 안 커질 뿐

만 아니라 주면은 사라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회의테이블에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윤태욱 과장이 얘기를 다 듣고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어필은 충분히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여담입니다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2020년 회계를 편성할 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은 지방 이양대상이었는데 그때 우리 예술위원회가 대응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간 유예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비가 또 왔는데 그 고비를 못 넘은 것이죠.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기금조정 관련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입장이 정책전문가와 많이 갈리는 겁니다. 사실 국가 차원이라든지 지방분권 정책 차원에서 보면 지방이양은 사소한 부분이고 많은 게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으로는 설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논리로 치면 지방자치에서 상주단체가 중요한지 복지시설이 필요한지 공연장이 필요한지는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는 유예만 할 수 있고 방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술위가 정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흐름 속에서 아르코가 해야 될 권한과 역할은 어디까지고 실제로 지역문화정책으로 넘어가서 진행되는 게 어떤 것이며 그 외에 재정원칙..... 그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가지고 지방분권 정책 안에서 예술파트에 대한 안이 우리한테 있어야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광역 등과도 논의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우선순위가 있겠죠. 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무처가 파악하고 계시는 정부로드맵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저희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정부가 의사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마냥 논의를 하고 있다가 결정이 되어 버리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쯤 그런 스크린을 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대응준비가 필요한 것을 체크하고 반드시 7기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로드맵이나 플랜을 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이원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다만, 사무처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본부장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을 할 때 9억 7,500만 원의 시드머니를 주면서 17개 시도가 작년 1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명확하게 17개 시도는 무엇을 할 것이고, 지금은 105개가 있는데 기초문화재단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세부 사업에 들어가면 다 오버랩이 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시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으로써 가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몫이고요. 창작활동이 같으면 국가급으로 키우는 것은 1차적으로 시도에서 키운 다음에 위원회에서 키운다든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글로컬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부분은 역시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예술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

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정체성이 이제는 논의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자립인데 요즘은 모두 지원으로 끝나서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자립은 못 갖춘다고 하더라도 자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는 큰 뜻을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상의 일이 논리로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결정되는 프로세스 안에서 현장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른바 예술계의 예산 요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시스템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2가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하고요. 추후라도 예산과 관련한 논의가 있다면 즉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안전을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중관 위원장 : 이제는 소위원회 활동 보고인데요.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정책혁신 소위원회 활동 보고입니다. 두 차례씩 하셨는데 소위원장님이 보고를 하시죠. 홍태림 위원님부터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예, 현장소통 소위원회 14차와 15차 회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차, 15차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작년 12월에 열렸던 아르코대토론회 후속 논의였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저희가 후속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지원사업의 평가체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문화예술계 공정생태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예술의 범위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가지를 몸통으로 삼고 원래 작년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지역간담회를 올해 5월 달에 한쪽 날개로 삼고요. 다른 쪽 날개는 올해 초에 2021년도 운영방안 논의를 할 때 원래 공론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원래 공론장을 올해 시범적으로 돌리고요. 시범적으로 돌릴 때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평가체계, 공정생태계, 기초예술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기재부의 홍보팀과 의논을 해서 올해 7월 전후로 시동을 걸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요. 저도 위원회 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기관이 중요한 문화예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예술위의 기관지의 성격으로 담론을 모을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2022년도 예산에 아르코 온라인 공론장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것이 돌아간다면 2021년도에 임시적으로 공론화 했던 작업들을 2022년도에도 이어나갈 부분은 이어나갈 것

이고요. 다른 소위나 TF에서도 현장소통 소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연결될 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 소위 위원장님이나 TF위원장님과 필요할 때마다 종합적인 논의를 해서 공론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고요. 부가적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과 관련된 부분이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논평을 저희가 내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좋은 타이밍에 내서 다음 날 미술은행 관련된 문제가 개선된 내용이 나와서 현장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효능감을 느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5월 달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다른 소위원회와는 다르게 공모로 모셔오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운영규정 상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을 할 수가 있고 어렵게 모셔 와서 적응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뭔가 해 나가야 되겠다는 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5월에 초기화가 된 다음에 위원들을 모시는 게 위원회 차원에서 손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 안에서는 가능하면 연임을 해 주시고요. 다만, 연임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장관님과 간담회 때도 제가 담당이라서 얘기를 드렸고 정창호 부장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셔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요. 예술계 불공정행위 공동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장소통 소위는 여러 가지 성격의 의제를 다루는 곳이고 그 중에서 민원성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문학 쪽에서 공정생태계 문제 관련해서 정책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대응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매우 안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문체부 쪽이나 예술인복지재단, 그 외의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예술계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공동대응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다시 모이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혁신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예. 정책소위는 자료가 있고 회의록이 다른 위원님들께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궁금하신 것은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보고를 드렸던 흐름으로 가고 있고 4가지 의제로 58페이지 박스에 있는 게 최종입니다. 예술의 현재성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예술현장이나 전체적으로 예술 자체에 대한 현재적 조건 등을 본질적으로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변동과 관련된 예술지원정책부분 그리고 기후위기와 예술정책인데요. 이 2가지는 예술이나 예술지원의 확장성을 고려한 주제고요. 사회변화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원체계를 넘어서 자원을 가져오려면 이런 정책적 융합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미리도 아니죠.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후위기는 그린뉴딜이나 계속해서 국가지원이 투입될 것 같고요. 기술은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요즘은 6차 산업혁명도 얘기

를 하는데요. 그것을 연결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지역이라든지 국가예술 등 예술지원체계까지도 정리를 하자는 것으로 진행해서 각각의 워킹그룹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소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계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여기에서 끝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취합하고 그 위에 보시면 프로세스 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현장 소위라든지 하반기에 잡혀 있는 아르코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고요. 소위에서는 위원회 보고서 형태로 12월 안에 만들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위원회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캠프가 아니라 위원회가 사회적으로 예술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리포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정책 소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개의 소위원회에 4번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활동 보고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문건으로 보고를 한 적이 많았는데요. 오늘 직접 소위원장님이 보고를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현장소통 소위원회도 성과가 많고요. 정책의제 같은 경우도 많이 진전이 되었네요. 역할분담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의제를 수기하고 역할분담까지 잘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이 문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홍대림 위원 :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안건 중에서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결국 거의 다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걱정해서 저희가 연초에 대외협력 관련된 기구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4가지 의제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서 '국가예술지원체계와 재원운용방안 제안서' 이것은 공동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지난 보고안건에서 나온 내용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의제로 다루고 있는 국가예술지원체계와 재원운용방안 제안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남요원 감사 : 정책혁신 소위원회의 4가지 의제를 정리해 보면, 하나는 현재 우리 예술계의 정책과 관련한 전체를 진단을 하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확장하고 대응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한테 놓여 있는 도전의 과제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가 각각의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번째가 실행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순하게 제안하자면, 예술위가 실행계획을 제안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안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의 지점에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예산 문제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상주단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위임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공식적 용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균형을 해야 한다고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그동안 위임사업의 정책에서 이관, 이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양이 된다는 것은 예산을 그쪽에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좁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역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지방정부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어갈 때 “지방의 문화예술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문화재단에 맡기겠다.” 여기 17개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17개 문화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지방정부의 사업소 성격입니다. 그러면 민간 예술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질적인 장르든 지역이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는 지역의 광역문화단체들이 하고 있는 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공고문도 내 줘야 하고 압박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이양되는 순간 그때 가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과정에 지방정부가 향후 이렇게 했을 때 자기도 우선사업 순위에서..... 중앙정부에서도 문화예술 부문이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때 지역의 광역정부에 우리가 어떤 입장의 어떤 메시지의 어떤 정책의 방향을 권고하고 강제할 것인가도 이원재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원재 위원 : 감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초안을 짰는데요. 50 페이지가 초안이고요. 그런데 여러 이유에서 예술의 현재성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저도 아까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기금과 관련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전환 지점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책 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 부분은 소위에서도 관심 있게 논의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조금 준비가 되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정숙 위원님이나 전고필 위원님도 지역문화 쪽의 활동을 많이 하셨던 위원님이 계시고 여러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현장 소위와 지역간담회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진행시키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도움을 드리고 참여를 할 텐데 그렇게 가져갈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지는 같이 상의를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현재성 관련해서는 이원재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제가 양쪽의 소위를 참여하다보니까 현장 소위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할지 방향은 나왔으니까 현장 소위와 미리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대립 위원 : 그리고 감사님과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5월 지역간담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다로 삼고 있는 3가지 의제 말고도 기초, 광역, 중앙으로 이어지는 거버넌스 구조를 얘기하면서 국가예술지원체계와 관련된 분명히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들을 모아서 위원님들과 다시 공유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활동보고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6. 논 의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논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촉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강윤주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이셨는데 임기가 2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소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여 소위원장 위촉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은선 위원 : 의견을 드리면 정정숙 위원님이 5시까지 자리를 비우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쉬거나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하면 어떨까요?

박종관 위원장 : 5시에 다시 참석하시겠다는 건가요?

유은선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코로나 대응TF와 관련해서 먼저 받도록 할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유란 위원 : 코로나19 대응TF는 2020년도 활동을 마무리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원래 계획 상으로는 2020년 연내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020년에 활동한 내역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나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추가적으로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올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 연내에 추가적으로 활동을 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기존에 확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원재 위원님과 유은선 위원님이 함께 해 주고 계시고요. 정책혁신부 연구원들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활동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재해를 대비한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중에서 “예술인재난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공제회 도입 제안”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예술인 복지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가 시작돼서 거기에 제가 예술인공제회 관련해서 논의를 드

렸더니 이 내용을 주요하게 해서 반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F활동 안에서 많이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와 더불어서 예술인공제회 도입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2009년에 추진되다가 멈춘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려내는 방안에 대해서 힘을 싣는 과정을 만들어보려는 내용이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유란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대응TF를 계속 운영하고 정말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급한 사업들에 대한 대안과 긴급한 사업들에 대한 환로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예술인재난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공제회 도입 제안을 벌써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영진위도 보니까 코로나19 TF가 창작지원본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코로나 TF활동을 영진위처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영진위에서는 코로나 TF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하면서 저희가 그쪽의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고 서로 연대해서 풀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코로나 TF가 운영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주십시오. 어찌 보면 당연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부 위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충원하실 수 있다면 마땅히 충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좋은 양질의 활동을 위한 밑바탕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진희 위원님도 성폭력 제도개선 대응TF 활동과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부자료에 없어서 듣기만 하는 것으로 힘드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체계 TF에서 주요하게 확인한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로 “6월까지 어떤 것을 수입으로 가져갈 것이냐?”인데요. 주요 목표를 사건조사와 가해자 조치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위가 올해 안에 피해자 지원이나 사후적 조치를 모두 다 할 수가 없고 1.5인을 갖고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해자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두고 조사에 대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전담인력이 1.5인 추가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사건조사와 가해자 조치에 대한 업무 그리고 피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복과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예방 교육과 성평등 문화축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요. 이것도 역시 예술인복지재단이나 문체부의 예산 프로그램과 매칭 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성폭력 소위원회 TF와의 협력 등을 전담인력의 주요 활동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번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 중에 하나는 전담 인력이 들어와도 예술위원회의 전체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역할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전담 인력은 지원총괄부에서 업무총괄을 당연히 하겠고요. 업무가 안정될 때까지 성폭력 대응TF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담당자가 하게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냐가 현재 예술위 체계 안에서는 비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TF에서 논의가 된 것은 가칭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소위가 장기과제에 대해서는 수임을 가져간다. 그래서 총괄부, TF,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 성평등 소위원회 등의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올해의 과제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종국 부장님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추진해 주시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만나서 업무협조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문체부 해당부서 등 1차적으로 네트워크하고 같이 힘을 내야 할 범위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협업 범위를 찾아가야 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촉안과 관련해서 72쪽과 73쪽을 참고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강윤주 소위원장의 임기가 2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소위원회 운영의 공백이 발생되어서 기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신입 위원 위촉 후 소위원장을 선임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의견을 주시고 소위원회장을 임명하여 공백 없이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의 배경입니다. 현재 위원이신 이진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정책혁신부에서 안을 잘 작성해 주셔서 제가 많이 결들일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고 위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재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하고 3개월 정도가 되는 시간동안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도 해야 하는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성평등 소위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 TF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속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소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자임을 했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7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외부위원의 임기가 원래 6월 4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위원장을 충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2월 4일 이후에 성평등 소위가 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재개를 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 우리 위원회에 대한 성평등 문제에 대한 의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이진희 위원님을 남은 기간 동안 성평등에 술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연락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마지막 논의사항인 다원예술지원 공모계획(안)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조금 들어야 할 것 같죠? 이종국 부장이 나와 있나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오늘 논의안건은 다원예술 지원사업 공모계획(안)입니다. 76쪽인데요. 소위 안건은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78페이지와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심사방식과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난 3월 16일 토론토도 거쳤지만 여전히 현장과의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장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위원회 전반의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의결안건에서 토론안건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76페이지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 28일에 의결안건으로 올라왔던 내용 대비 어떤 내용들이 수정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 형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창작준비지원과 실현지원이라고 나뉘어 있던 항목이 기존에 청년 예술가지원 사업의 모델을 차용한 방식이었던 것을 2005년부터 진행되었던 각종 포럼이라든지 현장 의견수렴 자료 그리고 3월 16일 있었던 VOC 등을 저희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크게 다원예술 활동지원과 앵커조직 운영지원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기대효과 칸에도 있지만 우리 사무처나 공공위주에서 “다원예술이 이거야.”라는 형태로 자꾸 규정을 짓고 이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이 스스로 정의하고 규정하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하단부의 심의방식도 기존 위원회의 지원사업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시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새로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미 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현장과의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 보시면 크게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와 동료집단 심의 그리고 앵커조직 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가), (나), (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다원예술 분야에 대해서 기존과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대전제는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실제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관리 방

식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그냥 복원의 의미로만 끝나지 실제 어떻게 뭔가 다른 방식을 제시할 것이냐? 그리고 그 현장의 움직임이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내놓기가 난망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ICT분야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한시적으로 e나라도움 사용이라든지 각종 보조금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방식으로 현장이 조금 더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기재부나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사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방식에 대한 신뢰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박경주 위원님께서 구성하셨던 자문위원들께도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를 확인한 게 “여전히 우리 사무처에 대한 예술현장의 신뢰 그리고 지지에 대한 것이 전무하구나.”, “이것은 아예 회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없었던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저희가 의도한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그 지점이 가장 크게 반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을 한 것은 Peer Group Review라는 것으로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때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당초의 안은 전담심의위원회제도에 따른 창작산실에서 활용하는 사항으로 구성을 해서 다원예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방식은 기존에도 400~500건 다원예술 심사건수가 오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무용을 하는데 뒤에 영상을 쏘면 “우리는 융복합이니까 다원예술이다.” 이런 형태의 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사평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항변을 해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왜 떨어졌지?”, “심사위원 구성이 이래서 떨어졌다.”라는 챗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심사과정에 전적으로 다 참여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약 400건 일 경우에 50개씩 무작위 랜덤 그룹 배정을 해서 나머지 49명의 동료들과 함께 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 생각하는 다원예술은 뭔지? 이런 키워드를 서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고견을 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방식들을 처음으로 시도했을 때 자문위원들께서 주로 주신 의견은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냐?”, “예술가들이 괜히 부담스러워서 지원신청 자체가 꺼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다양한 심의나 평가에 참여를 하셨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주체들의 자율적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에 있어서 온전한 복원의 첫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원예술 매개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자체의 중요성 보다는 실제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다원예술 현장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레이어들을 다시 복구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다원예술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이 끊어졌다고..... 서울문화재단이나 일부 재단에서는 진행을 했지만 동력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현장의 동력들을 계속 공공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사례도 있지만 매개 중간조직 그래서 앵커조직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이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화면에도 보이는 것처럼 78페이지와 79페이지에 심사 방식과 사업운영 방식이 기존 공모사업의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78페이지의 심사방식을 보시면 기존 계획은 저희가 일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서류심사를 하고 인터뷰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끝났다면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제안을 드렸던 것은 1차 예비심사에 말씀드린 대로 동료집단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상호 교류하고 위촉된 다원예술 분야 전문

가들의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앵커조직 지원에서도 나중에 선정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져야 될 활동지원대상자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표에서도 확실하게 절차가 여러 번 생기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과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들이 신청 외에도 지속적으로 심의과정에 참여해서 느끼는 피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원예술활동지원 사업은 애초에 Peer Group Review 상황을 적용해 보되 앵커조직 운영지원은 전문가 심사위원 방식으로 간소화 하는 것이 어떠한 대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79페이지의 사업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여전히 “현장과 예술위원회 사무처 간의 신뢰관계가 부족하구나.”라고 느꼈던 것인데요. 가장 큰 핵심은 저희가 작년에 공연대관료지원 사업이라든지 민간소극장을 긴급 지원하면서 고안한 방식입니다. e나라도움을 선정된 예술단체가 통하지 않고 현재의 관리 규정 안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앵커조직이 권역별 주관처처럼 실제 교부나 정산 과정을 같이 진행하면서 현재 우리 보조금 체계에서 우리가 다원예술 자체의 활동을 포용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3월 16일 포럼 때 한강에서 모래를 퍼다 나르는 다원예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덤프트럭을 빌리는 것과 모래를 채취하는 비용은 e나라도움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행정 처리라는 벽 앞에서 무력해 지거나 저해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작년 코로나 긴급 지원사업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차용해서 국고보조금 정산의 투명성은 최대한 기조를 버리지 않고 e나라도움을 사용하고 기존의 세무회계법인 과정에서 세무사를 설득하는 과정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6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행정절차에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원예술이 복원되면서 어떤 것들을 잃었고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가에 조금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가운데 있는 2안의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의 자문단께서는 “예술위원회가 해야 하는 교부 정산 업무를 왜 떠 넘기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책임전가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애초에 사무처의 일을 덜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예술가들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자 고안을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구나.” 그런 지점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 때 크게 쟁점이라기보다 우리의 앞으로 지원사업 방향이 어떨 것이냐? 그리고 향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복원사업과 함께 신규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우수 창작물 제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반년 이상이 안 남은 활동기간동안 4억 8,000만 원이라는 공모예산을 갖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 방식을 전제로 정산에 대한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술계와 다시 한번 호흡을 같이 갖고 가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타사업의 참여 경험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공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원포럼을 진행하시고 다원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신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작년 8월부터 나주에 있는 본관에서 대표적인 다원예술 축제의 대표자

이고 예술감독이셨던 분들을 모시고 사업혁신TF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원예술 사업이 제대로 복원이 되려면 현장의 피해자들과 함께 사업혁신TF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오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포럼 준비도 쉽지가 않았습니니다. 당사자의 참여라는 것은 사실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제 스스로 밝혀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좋은 인사말로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포럼은 잘 끝났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마련한 이 안의 방향을 제가 이종국 부장과 어느 정도 의논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반대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사업혁신 TF를 통해서 현장과 의논한 과정이 있으니 그 과정을 통해서 숙성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면, 저희가 이미 1월말 저희 위원회 회의 때 의결안건이 보류되었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안건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문을 하시는 분들과 자문회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2월 4일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때 저희가 포럼이나 다원예술 아카이브를 아르코기록원과 얘기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요. 다원예술을 복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 회의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축제 부분이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고가 나가기 전에 포럼을 한번 진행해서 현장과 복원되는 시점을 미리 얘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3월 16일 포럼을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왜 갑자기 이 과정이 중지되느냐는 것이죠. 긴 과정이고 현장과 함께 손을 잡고 왔는데 갑자기 이 과정이 끊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결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어제 이 부장님을 설득했고 이 부장님이 제 의견을 잘 받아 줘서 이해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복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장님이 보여준 포럼 관련된 내용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원예술 현장 의견 키워드를 보면 “심의체도의 혁신, 민주적 방식, 심의-평가-환류의 선순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술가들을 회복시키는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포럼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자분들과 같이 포럼을 준비했고 사업혁신 TF에서 작년에 사업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물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거기에는 과정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위원님, 발언 중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관계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토론 안건으로 돌리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페이지에도 있지만 당초 1월 29일 위원회에 제시되었던 사업안과 이 안에 대해서 저도 강요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안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현장의 요구들은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무처에서 재해석을 했고 작년 8월부터 2월 초까지 사업혁신 TF로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안과 저희가 급하지만 그동안 가

지고 있었던 고민과 함께 제시한 새로운 대안 중에 어떤 게 과연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남은 한정적인 기간 동안 가장 다원예술 복원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복원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왜 이 안건이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약속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공개가 되었다는 것인지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문위원단 그분들이 전체 현장의 전부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 늘 의문이었고요.

박경주 위원 : 저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그러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주 위원 : 여기 증거물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논의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박경주 위원님은 말씀을 하세요.

박경주 위원 : 이 부장님도 어떤 조직의 직원으로서 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에서 이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불만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 부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문회의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장르를 확장하는 것과 같이 결합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회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라도 회의를 하자고 얘기했고 본인도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작년 8월부터 다원예술 현장을 어렵게 설득해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설명자료와 예비공지가 나갔는데요. 이것 자체를 다 뒤집는 것은 현장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사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요. 저는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수요일에 이종국 부장님과 박경주 위원님 그리고 저까지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뭐가 달라진 것이죠? 그날 지원사업까지도 확인을 하지 않았나요?

박경주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최근 3~4일 동안 잠을 잘 못 잤는데요. 제가 밤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래도 되는지?”

유은선 위원 : 그날 두 분이 합의를 했고 저녁도 먹었는데요.

박경주 위원 : 그것은 이종국 부장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그날 얘기가 끝난 것 말고 변동된 것이 또 있는 건가요?

박경주 위원 : 변동된 것은, 제가 숙고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결하지 않고 오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그날 합의를 하신 게 아니었던 건가요?

박경주 위원 : 제가 혼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온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은선 위원 : 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난 것이 수요일인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날 얘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요? 다원예술이 박경주 위원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준비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날 제가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날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가 달라진 것이 있고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그것 이전에 수요일도 모르고 쟁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쟁점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의 상황이 우리 위원회에서 1월에 계획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다원사업 공모와 관련된 자문회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중간 카톡방에 올라왔지만 그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황이고 박경주 위원님의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제가 어쨌든 상황을 몰라요. 지금 브리핑을 받은 것과 박경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는 쟁점이 없어요.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신 것에서 조금 문제의식을 느끼는데요. 유은선 위원님도 “개인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누구도 다원에 대해서 무관심 했던 적이 없어요. 계속 다원에 관심을 가져 왔고 열심히 제안해 주셔서 그것을 다 수용해서 포럼까지 하신 상황이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뭐가 없잖아요. 뭐가 쟁점인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박경주 위원 : 이것의 쟁점은 과정입니다. 포럼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이 과정을 같이 해온 분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의결은 저희가 하죠. 저희가 하는데 그런 과정이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사업혁신 TF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것에.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뭐가 뒤집혔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뒤집혔나요? 그러니까 원래 나갔던 것과 이종국 부장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어요?

박경주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종국 부장이 애써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여려고 한 것이죠. 했는데 저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만 더 거치면.

유은선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거치자는 얘기를 어제 얘기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박경주 위원 : 이종국 부장과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제가 이것을 힘든 과정 속에서 현장과 같이 오면서 저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감정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마무리 하자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봤는데 이 책이 있고 이미 공지가 나간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지금 보신 건가요?

박경주 위원 :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인쇄되어 나온 것은 오늘 처음 봤죠.

남요원 감사 : 저는 대단히 당혹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원재 위원이 당혹함을 이야기 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더 당혹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현장과 우리 예술위 사무처가 지난 8월부터 쪽 해왔다는 것입니다. 해 왔는데 이것이 인쇄되었어요. 그러면 저희 사무처에서는 결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부장이 결재를 할 때 허위 내지는 잘못된.....

박종관 위원장 : 무슨 말씀이시지요?

남요원 감사 :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는데요. 박경주 위원님의 지적이 그렇게 들린다는 것인가요?

남요원 감사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정리가 되었을 때 지난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사업혁신TF와 같이 또는 현장하고 같이 다원예술 포럼을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지원총괄부와 최종적으로 박경주 위원님과 논의를 해서 정리가 된 것이 여기에 올라간 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난 주 수요일에 본 안건으로 올리기 전 단계에서 협의했던 내용과 뭐가 다르냐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저는 자세나 태도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은선 위원 : 왜냐하면 저도 이 사업설명자료 책자는 처음 봤는데요. 이 책을 안본 상태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건지?

박경주 위원 :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저희 홈페이지는 들어가서 봤어요. 왜냐하면 예고 공지가 나가있습니다. 곧 다원예술 사업이 복원되니까 지원사업 모집공고가 올라갈 테니까 기다리라는 예고 공지가 이미 나가 있어요. 거기에 큰 방향성은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양고요. 저는 아마 올해의 사업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총괄로 묶어서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은선 위원 : 공고가 나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박경주 위원 : 나가 있는데 이 안을 바꾼 거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별도사업은 공고하지 않죠.

유은선 위원 : 이것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박경주 위원 : 이게 3월로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책자 부분에 있는 문화예술 위원회 사업설명자료는 제가 2010년도 기획예산부장으로 있을 때 하나는 단위사업이고 하나는 세부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내부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하면서 기금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국고사업도 다 넣어서 나중에 국회 쪽으로는 단위사업 정도만 하는 설명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밖으로 안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밖으로 안 나갔으면 괜찮은 겁니까?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자문을 받아서, 어쨌든 그 당시에 피해를 겪었던 분들이 모인 자문을 통해서..... 박경주 위원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한은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숙하다면 저희들 사무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좌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이종국 부장한테 다원예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던 것은 “지난번 포럼도 있었고 박경주 위원님과 상의하고 협의된 내용이냐?”라고 했고 협의과정을 해서 “알겠다.”라고 했고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건 상황이 논의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길래 “왜 바뀌었냐?”라고 하니 “현장에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출발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2월에 의결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번 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숙성시켜서 지원제도로 의결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지원사업 계획의 의결권한은 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논의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요. 그때 박경주 위원님도 흔쾌히 동의를 하셨잖아요? 한번 더 의견을 듣기로 했고 의견을 들은 결과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2월 안과는 다른 숙성된 지원제도 등이 올라온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논의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박경주 위원 :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책자를 발

견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의 사업은 이미 지면에 올라간 것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바꾸고, 이미 이종국 부장이 처음에 뒤집자고 했을 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논의했던 시간과 축적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2021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공식적인 저희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2021년도 공모안은 수정되기를 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다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심의제도를 만약에 위원회에서 도입하고 싶다면.....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다원예술은 올해 복원이 되니까 다원예술에서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먼저 하면 어떠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년 만에 복원이 되는 해에는 현장예술가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계속 기다려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혁신적인 것을 하고 싶다면 “문화예술위원회 안에서 기존에 있는 지원체계의 문제점 등을 위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20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보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다원예술의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의견입니다. 올해 복원되는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려도 되나요?

박경주 위원 : 예.

이원재 위원 : 일단 쟁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쟁점이 뭔지를 모르겠고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기하신 게 다원 소위 관련해서 위원회 전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많은 위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지하고 존중해 왔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책자와 관련된 부분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입장이 달라서 그런데요. 말씀하시기 위한 근거로 이 책자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엄밀히 그렇게 말하면 이 책자는 박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근거가 아니라 2월 논의를 한 이후에 위원회에 재상정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공유된 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모든 자료도 어제 처음 봤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아니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객관화시키면 아까 설명한 대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것이죠.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결국 그것을 협의하는 것을 위임했고 자문을 해서 결정하게 했던 것이 기존의 공식적인 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은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핵심쟁점이 아닙니다. 누구를 배신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것이고 그동안 위임을 논의한 것이 오늘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쟁점이 뭔지를 모르겠고요. 추정컨대 쟁점은 원래 논의되던 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던 것은 2월 안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제기를 했고 논의를 더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논의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 것인지? 논의한 것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의된 게 조정된 것이 문제인지는 조금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 차이를 토론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요? 그 차이를 토론하고요. 저희 공통의 목적은 박경주 위원님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원을 복원하고요. 블랙리스트 부분은 블랙리스트대로 풀어가겠지만 다원예술 자체의 중요성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공모안을 만드는 것이 이 논의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처 안과 박경주 위원님의 생각이 다르신 것인지? 그것은 오늘 토론을 하면 합리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고요. 오늘 토론이 힘들면 그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해를 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늘 논의할 수 있는 폭을 좁혀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 다음에 중간과정 공유는 1월 말 의결하는 것을 보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자고 얘기를 했고요. 간담회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가 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중에 포럼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의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담당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포럼은 사실 앞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뤄졌고, 포럼을 준비하는 워크숍만 그 사이에 한번 했고 그리고 포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포럼밖에 없었어요.

이원재 위원 : 포럼 때 논의된 공모안이 있나요?

박경주 위원 : 없어요. 그때는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공모안 논의는 위원님과 담당사무처와 자문회의에 오신 분들이 논의를 하신 거잖아요?

박경주 위원 :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월 4일 이후에는 없었어요. 2월 4일이 마지막이었고요. 그때 포럼을 진행하면서 한번 더 수렴하고 위원회 간담회 때 다루기로 했었기 때문이에요. 의결은 여기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약속된 과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시간이 딜레이 된 것은 저희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담당자 지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팀이 많이 생겼던 것이고요. 약속됐던 과정은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 과정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의결안이 올라오는 것은, 중간 과정을 조금만 더 하면 좋게 풀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요원 감사 :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2월 안건은 합의된 안건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2월 위원회 때 올라온 안건은 저희 사무처의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올린 안건이었습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올린 안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안건, 예를 들어 논의안건이나 결의안건이나 보고안건이 모두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를 밟아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월 안건도 그렇게 프로세스를 밟아서 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현장의 의견을 보완하고 안건을 조금 더 숙성시켜서 다음에 의결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식하고 있는 기준은 2월 안건이 초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올라온 것인데요. 아까 박경주 위원님

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쟁점은 과정이다.” 그러니까 쟁점은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과정을 이야기 하셔서 혹시 태도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해진 상황이라서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원포럼에서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술가들의 예술가, 지원사업의 지원사업” 그러니까 다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논의를 하는 것은 좋은 공모안을 만들자는 목적이 같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를 통해서 제가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2월에 의결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서 조금 더 강화된 안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겠단다. 그 안에 현장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의견 안에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의미나 내용 또 다시 복원되는 가치들에 대한 논의는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올라온 안이 부족하거나 어떤 수순을 더 거쳐야 한다면 그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경주 위원님 말씀에 거꾸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과정 전체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혼돈 지점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을 굉장히 잘 밟아 왔고 마지막 과정만 남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외면한다면 과정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몰라서 계속 여쭙는 건데요. 지금 올라온 사무처안이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안이거나 단점이 많거나 혹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박경주 위원 : 거기에는 많은 이슈가 있어요. 저희가 원래 만들었던 초안과 완전히 다른 것이 왔기 때문이에요.

이진희 위원 :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박경주 위원 : 그러면 회의에 올렸던 초안을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리기는 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 저렇게 하면 논의가 2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원래 출발한 곳으로 간 것이거든요. 저희 논의가 지나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과정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무처라고 해도 좋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싶지 현장이 불편해 하는 제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위원님과 현장이 보기에 그런 단점을 가진 거라면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전제는 그렇게 차이가 클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박경주 위원 : 일단 가장 큰 것은 원래 트랙에 창작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트랙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보시면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몇 개년 계획을 짜면서 축제를 두 번째 단계로 2022년도에 넣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더 따지고 시각예술부와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얘기가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축제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받아서 저희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것을 낳고, 왜냐하면 다원예술은 플랫폼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외하는 것까지 이미.....그것은 회의자료입니다. 거기까지 다 얘기가 진행이 되었어요. 축제를 제외하는 것. 그리고 창작준비과정이 별로라고 얘기한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 위원님들 중에서도. 다원예술의 정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초예술다양성증진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제가 시각예술부와 사업을 짤 때도 되게 어려웠던 게 다원예술이 계속 기초예술다양성증진 밑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는데요. 결론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시각예술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사무처에서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문화다양성으로 갔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정의를 다시 잡자고 했지 트랙이 잘못되었으니 바꾸자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런데 없어졌어요?

박경주 위원 : 없어졌어요. 논의되었던 내용이 없어졌어요.

박경주 위원 : 그것은 제가 이 부장님이 일을 맡고 얼마 안 되었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안을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 너무 고민을 하다가 잠을 못자고 다음날 이 안을 자문했던 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올려드린 답변이 왔고요.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부장님께 “의결을 하지 말고 한번 더 토론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뒤집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원신청 대상에 축제가 제외된 것과 다원예술의 정의와 여기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단순히 경계에 있는 예술이냐?”, “다원예술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논의가 그날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는 간담회를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하자고 위원님들과 얘기를 한 것이었고 저는 그 사이에 이것을 가지고 자문위원들과 포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심의를 봐 주시겠어요. 전담심의위원으로 이미 얘기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논점이 아니었어요. 논점은 다원예술의 의미고 다원예술을 저희가 6년 동안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다원예술은 그때와 많이 다르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류심의 1차 지원신청서 검토 그리고 인터뷰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기본틀 전체를 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보류할 때 논의는 논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기본틀 자체를 다 바꿨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유은선 위원 : 저는 2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일단 의결을 하지 않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합의를 하신 거잖아요?

박경주 위원 : 예.

유은선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결정된 것처럼 “논의하기로 했는데 왜 결정을 하느냐?”라는 것으로 들렸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시는 자문위원이 몇 분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에 만나고 그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니까 그분들이 화를 냈다.

박경주 위원 : 만나지 않았어요.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보내드렸더니 의견이 왔다는 거잖아요.

박경주 위원 : 그 의견을 이종국 부장에게도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이, 솔직히 요즘은 100인 100색이 아니라 100인 200색이라고 할 정도로 한 사람 안에서 여러 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박경주 위원 :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몇 명이시기보다는 사업혁신 TF에서,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몇 명이냐는 것이죠.

박경주 위원 : 그게 과정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회의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올해 복원되는 시점에 맞춰서 공론화 과정이나 포럼을 같이 기획하기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시기로 했다면서요?

박경주 위원 : 예.

유은선 위원 :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박경주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자문위원이 필요하니까 사업혁신TF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회의에서 다..... 시각예술부에 회의록이 있어요.

유은선 위원 :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진행발언을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팩트가 뭐고 무엇을 고치자는 것에 대해 결론을 내야지 계속해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박경주 위원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상태로 안전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요. 안전을 정리해서 다시 논의를 재개할까 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경주 위원 : 제가 먼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셨던 분들과 회의를 다음 주라도 만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위원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 수요일에 급하게 받고 그냥 납득을 했던 것은 저희 공모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회의를 해서 현장과의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잘 얘기를 끝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그렇게 한번 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되도록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우선 박경주 위원님 입장에서, 그리고 저 같아도 나는 이해를 했는데 밖에서 설명을 할 때는 오히려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박 위원님과 지원총괄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도 가능하시다면 그 분들과 실무진이 모여서 지금 나온 것과 뭐가 다른지와 조정하고 합의를 하는 회의를 빨리 하셔서 나중에 서면의결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유은선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예, 저는 말씀하신 제안들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고요. 전반적으로 기본방향이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다원예술지원사업의 복원과 관련해서 현장과의 소통이나 다원예술의 가치는 다들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개 안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충돌적인 부분은 없고 변화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어를 떠나서 보면 첫 번째 기조는 둘 다 창작지원중심인데 하나는 준비지원과 실현지원의 트랙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같이 논의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안은 그것을 활동지원과 앵커조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컨대 최근에 많이 하는 네트워크 지원, 직접 창작이 아닌 창작하는 다원현장의 사람들을 네트워킹 하는 것을 지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견해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독해하기로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랬을 때 기존의 다른 사업들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쟁점이 되었던 것들은 그게 자발적 생태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냐? 아니면 지원기관들 행정예 그것을 관리체계에 넣는 것이냐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앵커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마치 밖에서 위원회가 그것을 관리체계처럼 쓰는 것처럼 오해가 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 생태계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앵커조직을 조직해주는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000만 원에 3개 사업지원은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그 숫자를 3,000만 원에 5개 지원으로 하든지 이런 것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협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뒤에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세히 봤는데요. 이것도 현장과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접근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다른 데에서 많이 실험하고 지향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동료집단 심사는 기존에 전문가 위주로 심사가 되니까 탈락자들이나..... 다윈은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을 적용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방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번에 도입하는 게 좋을지? 특히 현장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지 더 좋게 수용하는지는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결정하시면 충돌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민들의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처럼 그냥 공모를 주는 방법이 아니라 자율성은 존중하되 잘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윈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오해가 있거나 혹은 더 좋은 안이 있거나 의견이 다르다면 토론을 통해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테이블은 오늘 결정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사무처도 참여를 하셔서 논의 후에 결정해서 공모가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예, 조금 전에 유은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의가 잘 진행되어서 그 결과는 저희가 서면결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위원회나 사무처는 같은 목표를 가는 존재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윈예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혁신과제로 들어가 있어서 예산을 따는 과정부터 사무처도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그에 대해서도 첫 출발을 잘 하도록 우리 직원 모두 책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도 위원님이나 현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의미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며 진행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좋은 공모안을 만들자고 하는 게 위원님들과 사무처가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까 이종국 부장의 보고 속에 위원장으로서 걸리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무처가 현장의 불신을 이렇게 받는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기존의 안을 숙성해서 조금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라는 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현장과 혹은 우리 위원회와 서로 이견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 재빠르게 해결하고 합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한 노력

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 의견은 없으시죠?

박경주 위원 : 동료 평가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있는지는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늘 긴 시간 집중해서 회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회의 중에 기재부의 결정을 위원님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패배감으로 오고 지치지 않도록 제도의 벽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위원이라고 하는 존재감도 키우고 예술위의 자율권도 키우고 사업도 잘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정말 집중해서 잘 논의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두현 사무처장 직무대행 :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일정 조정)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회의종료)